

2026 지방선거 산업단지 노동자 5대 정책요구 정책질의서

2026. 05. 26. 민주노총 전북본부 · 민주노총 완주산단대표자 협의회 · 금속노조 전북지부

민주노총 · 금속노조 · 화섬식품노조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아래 내용의 산업단지 노동자 정책요구를 15,174+명의 서명 (전라북도 1,716+명)으로 모았습니다. 이에, 귀 정당 및 후보자에 정책 질의합니다. 각 질의에 대한 입장과 의견은 산업단지 노동자 정책요구에 대한 정당 및 후보자 별 입장을 종합하여 발표할 예정이니 정해진 기한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회신처: ybs4740@hanmail.net
- 회신 기한: 2026년 5월 29일(금) 21시
- 담당: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미조직전략부장 양범식 (010-4401-1356)

1) 산업단지 노동자 참여

(1) 산업단지 공동위원회 설치(지역사회 협의구조 구축)

- 지역사회로 확장된 협의틀을 구축하고 협약을 이끌어냄으로써 산업단지 내 다양한 의제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동 정책의 수준을 높이고, 산업단지 노동자의 권리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례의 제정에 이르는 틀로써 산업단지 공동위원회를 설치가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의 구조인 공동위원회는 일터와 삶터가 함께 나아지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101-1	산업단지 공동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	✓		

(2) 지자체와 산업단지 소규모 사업장이 공동 출연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지원

- 대기업과 정규직에만 유리한 사내복지기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조성한 기금을 복지증진 사업 혹은 행사, 교육·훈련, 자녀 학자금 등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사업장이 모일수록, 더 많은 노동자가 모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편차가 매우 큽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지방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전국 곳곳의 모든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합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102-1	산업단지 공동근로복지기금 예산 지원	✓		
-------	---------------------	---	--	--

2) 산업단지 노동자 노동권 보장

(1)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사업 강화

- 노동자 개개인은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노동약자가 일터에서 겪게 되는 노동시간 문제, 휴가 문제, 4대 보험 문제 등 기초적인 노동조건 및 권리구제에 대해 안내받고,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빈번한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단지 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201-1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상담 지원	✓		
201-2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권리구제 사업 지원	✓		

(2) 산업단지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산재, 임금 체불, 불법파견 등)

- 고용노동부 자료(2021.7. 기준)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발생한 59,211개 사업장의 91.6%가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025년 1분기 전국 산업단지 229개 제조업체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의 절반 가까이가 불법파견(45.7%)에 해당했습니다. 산재 사망 노동자의 6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2023년 기준)했고, 전체 재해자 수에서도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0.1%에 불과합니다. 전체 노동조합 조직률(2024. 기준) 13%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권리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 모여있는 산업단지의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교육과 근로감독 강화에 대한 높은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202-1	산업단지 노동기본권 교육 지원	✓		
202-2	산업단지 근로감독 강화	✓		

3) 노동안전망 구축

(1) 산업단지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공동안전관리자 배치 운영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마다 안전관리자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 산업재해 예방계획, 안전규정,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개선, 건강 진단 등에 대해 조언하거나 논의·결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모두 예외로 두고 있어서 노동자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 산업단지에서는 각각의 사업장 규모가 작더라도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산업단지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301-1	산업단지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301-2	산업단지 공동안전관리자 배치	✓		

(2) 산재예방 조례 제정 및 사업 예산 편성

-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136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례 제정과 함께 구체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302-1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제정	✓		
302-2	산업재해 예방 사업 예산 지원	✓		

(3) 산업단지 안전보건 지킴이 사업 직접 운영 신설 및 확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의 ‘안전한 일터 지킴이’, 부산시의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등 사업장의 안전을 점검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맡은 안전보건 지킴이 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전체 사업장 숫자에 비하면 안전보건 지킴이의 수가 턱없이 모자랍니다. 산업단지 차원에서 안전보건 지킴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확대해서 노동자 안전 사각지대를 남김없이 비추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303-1	산업단지 안전보건지킴이 도입 및 확대	✓		

4) 노동복지 강화

- 산업집적법은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공동(복지)부담금을 모아 공동 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 마다 따로 설치하기 어려운 휴게실, 편의시설 등을 공동부담금을 통해 마련해 노동자의 휴식과 편의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실제 주거, 건강검진, 휴게, 교통, 안전피복 등에 대한 공동복지 수요가 매우 높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400-1	산업단지 공동(복자)부담금 예산 지원	✓		
-------	----------------------	---	--	--

(1) 산업단지 공동휴게시설 설치

- 산업안전보건법은 2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20인 미만의 사업장들은 휴게시설이 필요해도 설치 의무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 각각의 사업장이 2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여러 사업장의 노동자가 모여있는 산업단지라면 휴게 시설을 설치해야 마땅합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401-1	산업단지 공동 휴게실 설치 의무화	✓		
401-2	산업단지 공동 휴게실 설치 지원	✓		

(2)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확대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화학물질 등으로 인해 일반 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의 세탁·수선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 노동권 증진과 산업 재해 예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이를 모든 지방자치단체, 모든 산업단지로 확대 운영하여 노동자를 유해물질 노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합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402-1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조례 제정	✓		
402-2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예산 지원	✓		

(3) 공영 통근버스 도입 지원

- 출퇴근 시간에 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산업단지 특성 상 대중교통의 운영 효율이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개별 교통수단 의존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공영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가 크지 않은 데 반해 산업단지 노동자의 통근 편의가 크게 증대되고 출퇴근 시간에만 집중되는 교통 수요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통근버스의 도입은 사업단지 내에서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 해소, 주차 문제 완화, 인력난 완화, 교통 안전 향상 등에 구체적인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2017-6] 산업단지 공동통근버스 모니터링 및 활성화 방안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403-1	산업단지 공영 통근버스 도입	✓		

(4) 무료 건강검진 센터 확대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를 통해 소규모사업장이나 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한 건강 진단과 사후 관리, 사업장 위해도 평가, 작업장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소규모 사업장이 모인 산업단지에서는 더욱 효율적으로 혜택을 넓힐 수 있습니다. 무료 건강검진센터를 산업단지 중심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큼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404-1	무료 건강검진센터 설치 및 확대	✓		

(5) 산업단지 노동자 ‘천원의아침밥’ 사업 지원

- 산업단지에는 자체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못하는 규모의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거나, 질 낮은 식사를 피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결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아침 식사를 시중의 절반 가격에 제공하거나(광주), 기초자치단체와 공동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부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가 예산 배정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 확대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천원의아침밥’ 사업 등 지원 사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405-1	‘천원의아침밥’ 예산 지원	✓		

(6) 산업단지 노동자 주거 안정 공급·이주노동자 쉼터 설치

-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주거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체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마다 기숙사를 제공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산업단지 입주 업체 입장에서도 산업단지 차원에서 기숙사 혹은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된다면 구인의 어려움 또한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숙사에서 나아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산업단지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 이주노동자들은 대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사업장 변경을 하려면 구직 기간에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친구 집, 모텔, 민간단체 쉼터 등을 전전하며 소득이 없는 기간에 오히려 비용 지출이 많아집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이직 시기에 임시로 기거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합니다.
- 이주노동자 대다수는 공장 내 기숙사에 거주합니다.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사업장 내 부속시설 등 인간다운 주거 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마저도 시끄러운 소음과 진동이 끊이지 않는 생산시설 바로 옆인 경우가 많아 퇴근 후에도 편히 쉬기가 어렵습니다. 이주노동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공기숙사는 더욱 절실합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406-1	산업단지 공공기숙사 공급 및 확대	✓		
406-2	산업단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확대	✓		

406-3	산업단지 공공기숙사·공공임대주택의 이주노동자 쉼터 활용	✓		
-------	-----------------------------------	---	--	--

5) 산업단지 노동인권 보호 근거 마련 및 노동 기본 조례 제정

- 전국 24곳에 노동 기본 조례가 제정(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되어 있습니다. 노동 기본 조례는 해당 지역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24년 민간 주도 실태조사 결과 노동법 위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산업단지의 노동자들은 각종 법 위반에 노출되어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노동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 및 증진하기 위해 노동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합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500-1	노동 인권 조례 제정	✓		

(1) 산업단지 지속 발전을 위한 노동 정책 제정

- 노동자는 기업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노동자가 지역에 정주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질과 산업단지의 노동 정책 및 노동인권 보호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노동자의 지역 유출이 지속된다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노동 정책 제정이 필수적입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501-1	노동 정책 제정	✓		

(2) 노조법 개정 시행에 따른 원청 교섭 지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노조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을 지원하며, 나아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더욱 열악한 처우에 놓인 노동자를 위해 초기업단위 교섭을 지원하며 산업단지 전체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502-1	원청 교섭 지원	✓		
502-2	초기업단위 교섭 지원	✓		

진보당 백승재 도지사 후보 정책질의서 회신

2026 지방선거 산업단지 노동자 5대 정책요구 정책질의서

2026. 05. 26. 민주노총 전북본부 · 금속노조 전북지부

민주노총 · 금속노조 · 화섬식품노조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아래 내용의 산업단지 노동자 정책요구를 15,174+명의 서명 (전라북도 1,716+명)으로 모았습니다. 이에, 귀 정당 및 후보자에 정책 질의합니다. 각 질의에 대한 입장과 의견은 산업단지 노동자 정책요구에 대한 정당 및 후보자 별 입장을 종합하여 발표할 예정이니 정해진 기한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회신처: ybs4740@hanmail.net
- 회신 기한: 2026년 5월 29일(금) 21시
- 담당: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미조직전략부장 양범식 (010-4401-1356)

1) 산업단지 노동자 참여

(1) 산업단지 공동위원회 설치(지역사회 협의구조 구축)

- 지역사회로 확장된 협의틀을 구축하고 협약을 이끌어냄으로써 산업단지 내 다양한 의제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동 정책의 수준을 높이고, 산업단지 노동자의 권리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례의 제정에 이르는 틀로써 산업단지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의 구조인 공동위원회는 일터와 삶터가 함께 나아가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101-1	산업단지 공동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	0		

(2) 지자체와 산업단지 소규모 사업장이 공동 출연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지원

- 대기업과 정규직에만 유리한 사내복지기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조성한 기금을 복지증진 사업 혹은 행사, 교육 · 훈련, 자녀 학자금 등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사업장이 모일수록, 더 많은 노동자가 모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편차가 매우 큽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지방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전국 곳곳의 모든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합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102-1	산업단지 공동근로복지기금 예산 지원	0		

2) 산업단지 노동자 노동권 보장

(1)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사업 강화

- 노동자 개개인은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노동약자가 일터에서 겪게 되는 노동시간 문제, 휴가 문제, 4대 보험 문제 등 기초적인 노동조건 및 권리구제에 대해 안내받고,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빈번한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단지 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201-1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상담 지원	0		
201-2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권리구제 사업 지원	0		

(2) 산업단지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산재, 임금 체불, 불법파견 등)

- 고용노동부 자료(2021.7. 기준)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발생한 59,211개 사업장의 91.6%가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025년 1분기 전국 산업단지 229개 제조업체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의 절반 가까이가 불법파견(45.7%)에 해당했습니다. 산재 사망 노동자의 6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2023년 기준)했고, 전체 재해자 수에서도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0.1%에 불과합니다. 전체 노동조합 조직률(2024. 기준) 13%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권리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 모여있는 산업단지의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교육과 근로감독 강화에 대한 높은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202-1	산업단지 노동기본권 교육 지원	0		
202-2	산업단지 근로감독 강화	0		

3) 노동안전망 구축

(1) 산업단지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공동안전관리자 배치 운영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마다 안전관리자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 산업재해 예방계획, 안전규정,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개선, 건강 진단 등에 대해 조언하거나 논의·결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모두 예외로 두고 있어서 노동자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 산업단지에서는 각각의 사업장 규모가 작더라도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산업단지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301-1	산업단지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0		
301-2	산업단지 공동안전관리자 배치	0		

(2) 산재예방 조례 제정 및 사업 예산 편성

-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136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례 제정과 함께 구체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302-1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제정	0		
302-2	산업재해 예방 사업 예산 지원	0		

(3) 산업단지 안전보건 지킴이 사업 직접 운영 신설 및 확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의 ‘안전한 일터 지킴이’, 부산시의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등 사업장의 안전을 점검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맡은 안전보건 지킴이 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전체 사업장 숫자에 비하면 안전보건 지킴이의 수가 턱없이 모자랍니다. 산업단지 차원에서 안전보건 지킴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확대해서 노동자 안전 사각지대를 남김없이 비추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303-1	산업단지 안전보건지킴이 도입 및 확대	0		

4) 노동복지 강화

- 산업집적법은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공동(복지)부담금을 모아 공동 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 마다 따로 설치하기 어려운 휴게실, 편의시설 등을 공동부담금을 통해 마련해 노동자의 휴식과 편의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실제 주거, 건강검진, 휴게, 교통, 안전피복 등에 대한 공동복지 수요가 매우 높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	----	----	----	----

400-1	산업단지 공동(복자)부담금 예산 지원	0		
-------	----------------------	---	--	--

(1) 산업단지 공동휴게시설 설치

- 산업안전보건법은 2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20인 미만의 사업장들은 휴게시설이 필요해도 설치 의무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 각각의 사업장이 2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여러 사업장의 노동자가 모여있는 산업단지라면 휴게 시설을 설치해야 마땅합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401-1	산업단지 공동 휴게실 설치 의무화	0		
401-2	산업단지 공동 휴게실 설치 지원	0		

(2)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확대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화학물질 등으로 인해 일반 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의 세탁·수선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 노동권 증진과 산업 재해 예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이를 모든 지방자치단체, 모든 산업단지로 확대 운영하여 노동자를 유해물질 노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합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402-1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조례 제정	0		
402-2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예산 지원	0		

(3) 공영 통근버스 도입 지원

- 출퇴근 시간에 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산업단지 특성 상 대중교통의 운영 효율이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개별 교통수단 의존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공영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가 크지 않은 데 반해 산업단지 노동자의 통근 편의가 크게 증대되고 출퇴근 시간에만 집중되는 교통 수요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통근버스의 도입은 사업단지 내에서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 해소, 주차 문제 완화, 인력난 완화, 교통 안전 향상 등에 구체적인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 ※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2017-6] 산업단지 공동통근버스 모니터링 및 활성화 방안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403-1	산업단지 공영 통근버스 도입	0		

(4) 무료 건강검진 센터 확대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를 통해 소규모사업장이나 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한 건강 진단과 사후 관리, 사업장 위해도 평가, 작업장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소규모 사업장이 모인 산업단지에서는 더욱 효율적으로 혜택을 넓힐 수 있습니다. 무료 건강검진센터를 산업단지 중심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큼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404-1	무료 건강검진센터 설치 및 확대	0		

(5) 산업단지 노동자 ‘천원의아침밥’ 사업 지원

- 산업단지에는 자체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못하는 규모의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거나, 질 낮은 식사를 피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결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아침 식사를 시중의 절반 가격에 제공하거나(광주), 기초자치단체와 공동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부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가 예산 배정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 확대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천원의아침밥’ 사업 등 지원 사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405-1	‘천원의아침밥’ 예산 지원	0		

(6) 산업단지 노동자 주거 안정 공급·이주노동자 쉼터 설치

-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주거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체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마다 기숙사를 제공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산업단지 입주 업체 입장에서도 산업단지 차원에서 기숙사 혹은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된다면 구인의 어려움 또한 크게 줄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숙사에서 나아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산업단지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 이주노동자들은 대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사업장 변경을 하려면 구직 기간에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친구 집, 모텔, 민간단체 쉼터 등을 전전하며 소득이 없는 기간에 오히려 비용 지출이 많아집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이직 시기에 임시로 기거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합니다.
- 이주노동자 대다수는 공장 내 기숙사에 거주합니다.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사업장 내 부속시설 등 인간다운 주거 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마저도 시끄러운 소음과 진동이 끊이지 않는 생산시설 바로 옆인 경우가 많아 퇴근 후에도 편히 쉬기가 어렵습니다. 이주노동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공기숙사는 더욱 절실합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406-1	산업단지 공공기숙사 공급 및 확대	0		
406-2	산업단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확대	0		

406-3	산업단지 공공기숙사·공공임대주택의 이주노동자 쉼터 활용	0		
-------	-----------------------------------	---	--	--

5) 산업단지 노동인권 보호 근거 마련 및 노동 기본 조례 제정

- 전국 24곳에 노동 기본 조례가 제정(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되어 있습니다. 노동 기본 조례는 해당 지역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24년 민간 주도 실태조사 결과 노동법 위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산업단지의 노동자들은 각종 법 위반에 노출되어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노동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 및 증진하기 위해 노동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합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500-1	노동 인권 조례 제정	0		

(1) 산업단지 지속 발전을 위한 노동 정책 제정

- 노동자는 기업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노동자가 지역에 정주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질과 산업단지의 노동 정책 및 노동인권 보호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노동자의 지역 유출이 지속된다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노동 정책 제정이 필수적입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501-1	노동 정책 제정	0		

(2) 노조법 개정 시행에 따른 원청 교섭 지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노조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을 지원하며, 나아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더욱 열악한 처우에 놓인 노동자를 위해 초기업단위 교섭을 지원하며 산업단지 전체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502-1	원청 교섭 지원	0		
502-2	초기업단위 교섭 지원	0		

2026 지방선거의 무한 후보(군산시장) 정책질의서 답변 제출

2026 지방선거 산업단지 노동자 5대 정책요구 정책질의서

2026. 05. 26. 민주노총 전북본부 ·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 금속노조 전북지부

민주노총 · 금속노조 · 화섬식품노조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아래 내용의 산업단지 노동자 정책요구를 15,174+명의 서명 (전라북도 1,716+명)으로 모았습니다. 이에, 귀 정당 및 후보자에 정책 질의합니다. 각 질의에 대한 입장과 의견은 산업단지 노동자 정책요구에 대한 정당 및 후보자 별 입장을 종합하여 발표할 예정이니 정해진 기한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회신처: ybs4740@hanmail.net
- 회신 기한: 2026년 5월 29일(금) 21시
- 담당: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미조직전략부장 양범식 (010-4401-1356)

1) 산업단지 노동자 참여

(1) 산업단지 공동위원회 설치(지역사회 협의구조 구축)

- 지역사회로 확장된 협의틀을 구축하고 협약을 이끌어냄으로써 산업단지 내 다양한 의제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동 정책의 수준을 높이고, 산업단지 노동자의 권리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례의 제정에 이르는 틀로써 산업단지 공동위원회를 설치가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의 구조인 공동위원회는 일터와 삶터가 함께 나아가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101-1	산업단지 공동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	○		

(2) 지자체와 산업단지 소규모 사업장이 공동 출연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지원

- 대기업과 정규직에만 유리한 사내복지기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조성한 기금을 복지 증진 사업 혹은 행사, 교육·훈련, 자녀 학자금 등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사업장이 모일수록, 더 많은 노동자가 모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편차가 매우 큽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지방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전국 곳곳의 모든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합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102-1	산업단지 공동근로복지기금 예산 지원	○		
-------	---------------------	---	--	--

2) 산업단지 노동자 노동권 보장

(1)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사업 강화

- 노동자 개개인은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노동약자가 일터에서 겪게 되는 노동시간 문제, 휴가 문제, 4대 보험 문제 등 기초적인 노동조건 및 권리구제에 대해 안내받고,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빈번한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단지 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201-1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상담 지원	○		
201-2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권리구제 사업 지원	○		

(2) 산업단지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산재, 임금 체불, 불법파견 등)

- 고용노동부 자료(2021.7. 기준)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발생한 59,211개 사업장의 91.6%가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025년 1분기 전국 산업단지 229개 제조업체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의 절반 가까이가 불법파견(45.7%)에 해당했습니다. 산재 사망 노동자의 6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2023년 기준)했고, 전체 재해자 수에서도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0.1%에 불과합니다. 전체 노동조합 조직률(2024. 기준) 13%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권리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 모여있는 산업단지의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교육과 근로감독 강화에 대한 높은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202-1	산업단지 노동기본권 교육 지원	○		
202-2	산업단지 근로감독 강화	○		

3) 노동안전망 구축

(1) 산업단지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공동안전관리자 배치 운영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마다 안전관리자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 산업재해 예방계획, 안전규정,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개선, 건강 진단 등에 대해 조언하거나 논의·결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모두 예외로 두고 있어서 노동자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 산업단지에서는 각각의 사업장 규모가 작더라도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산업단지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301-1	산업단지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301-2	산업단지 공동안전관리자 배치	○		

(2) 산재예방 조례 제정 및 사업 예산 편성

-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136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례 제정과 함께 구체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302-1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제정	○		
302-2	산업재해 예방 사업 예산 지원	○		

(3) 산업단지 안전보건 지킴이 사업 직접 운영 신설 및 확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의 ‘안전한 일터 지킴이’, 부산시의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등 사업장의 안전을 점검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맡은 안전보건 지킴이 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전체 사업장 숫자에 비하면 안전보건 지킴이의 수가 턱없이 모자랍니다. 산업단지 차원에서 안전보건 지킴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확대해서 노동자 안전 사각지대를 남김없이 비추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303-1	산업단지 안전보건지킴이 도입 및 확대	○		

4) 노동복지 강화

- 산업집적법은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공동(복지)부담금을 모아 공동 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 마다 따로 설치하기 어려운 휴게실, 편의시설 등을 공동부담금을 통해 마련해 노동자의 휴식과 편의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실제 주거, 건강검진, 휴게, 교통, 안전피복 등에 대한 공동복지 수요가 매우 높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400-1	산업단지 공동(복지)부담금 예산 지원	○		
-------	----------------------	---	--	--

(1) 산업단지 공동휴게시설 설치

- 산업안전보건법은 2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20인 미만의 사업장들은 휴게시설이 필요해도 설치 의무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 각각의 사업장이 2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여러 사업장의 노동자가 모여있는 산업단지라면 휴게 시설을 설치해야 마땅합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401-1	산업단지 공동 휴게실 설치 의무화	○		
401-2	산업단지 공동 휴게실 설치 지원	○		

(2)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확대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화학물질 등으로 인해 일반 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의 세탁·수선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 노동권 증진과 산업 재해 예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이를 모든 지방자치단체, 모든 산업단지로 확대 운영하여 노동자를 유해물질 노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합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402-1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조례 제정	○		
402-2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예산 지원	○		

(3) 공영 통근버스 도입 지원

- 출퇴근 시간에 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산업단지 특성 상 대중교통의 운영 효율이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개별 교통수단 의존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공영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가 크지 않은 데 반해 산업단지 노동자의 통근 편의가 크게 증대되고 출퇴근 시간에만 집중되는 교통 수요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통근버스의 도입은 사업단지 내에서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 해소, 주차 문제 완화, 인력난 완화, 교통 안전 향상 등에 구체적인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 ※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2017-6] 산업단지 공동통근버스 모니터링 및 활성화 방안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403-1	산업단지 공영 통근버스 도입	○		

(4) 무료 건강검진 센터 확대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를 통해 소규모사업장이나 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한 건강 진단과 사후 관리, 사업장 위해도 평가, 작업장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소규모 사업장이 모인 산업단지에서는 더욱 효율적으로 혜택을 넓힐 수 있습니다. 무료 건강검진센터를 산업단지 중심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큼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404-1	무료 건강검진센터 설치 및 확대	○		

(5) 산업단지 노동자 ‘천원의아침밥’ 사업 지원

- 산업단지에는 자체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못하는 규모의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거나, 질 낮은 식사를 피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결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아침 식사를 시중의 절반 가격에 제공하거나(광주), 기초자치단체와 공동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부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가 예산 배정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 확대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천원의아침밥’ 사업 등 지원 사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405-1	‘천원의아침밥’ 예산 지원	○		

(6) 산업단지 노동자 주거 안정 공급·이주노동자 쉼터 설치

-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주거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체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마다 기숙사를 제공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산업단지 입주 업체 입장에서도 산업단지 차원에서 기숙사 혹은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된다면 구인의 어려움 또한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숙사에서 나아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산업단지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 이주노동자들은 대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사업장 변경을 하려면 구직 기간에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친구 집, 모텔, 민간단체 쉼터 등을 전전하며 소득이 없는 기간에 오히려 비용 지출이 많아집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이직 시기에 임시로 기거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합니다.
- 이주노동자 대다수는 공장 내 기숙사에 거주합니다.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사업장 내 부속시설 등 인간다운 주거 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마저도 시끄러운 소음과 진동이 끊이지 않는 생산시설 바로 옆인 경우가 많아 퇴근 후에도 편히 쉬기가 어렵습니다. 이주노동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공기숙사는 더욱 절실합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406-1	산업단지 공공기숙사 공급 및 확대	○		
406-2	산업단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확대	○		

406-3	산업단지 공공기숙사·공공임대주택의 이주노동자 쉼터 활용	0		
-------	-----------------------------------	---	--	--

5) 산업단지 노동인권 보호 근거 마련 및 노동 기본 조례 제정

- 전국 24곳에 노동 기본 조례가 제정(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되어 있습니다. 노동 기본 조례는 해당 지역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24년 민간 주도 실태조사 결과 노동법 위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산업단지의 노동자들은 각종 법 위반에 노출되어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노동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 및 증진하기 위해 노동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합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500-1	노동 인권 조례 제정	○		

(1) 산업단지 지속 발전을 위한 노동 정책 제정

- 노동자는 기업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노동자가 지역에 정주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질과 산업단지의 노동 정책 및 노동인권 보호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노동자의 지역 유출이 지속된다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노동 정책 제정이 필수적입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501-1	노동 정책 제정	○		

(2) 노조법 개정 시행에 따른 원청 교섭 지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노조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을 지원하며, 나아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더욱 열악한 처우에 놓인 노동자를 위해 초기업단위 교섭을 지원하며 산업단지 전체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502-1	원청 교섭 지원	○		
502-2	초기업단위 교섭 지원	○		

진보당 강성희 전주시장 후보 정책질의서 회신

2026 지방선거 산업단지 노동자 5대 정책요구 정책질의서

2026. 05. 26. 민주노총 전북본부 · 금속노조 전북지부

민주노총 · 금속노조 · 화섬식품노조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아래 내용의 산업단지 노동자 정책요구를 15,174+명의 서명 (전라북도 1,716+명)으로 모았습니다. 이에, 귀 정당 및 후보자에 정책 질의합니다. 각 질의에 대한 입장과 의견은 산업단지 노동자 정책요구에 대한 정당 및 후보자 별 입장을 종합하여 발표할 예정이니 정해진 기한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회신처: ybs4740@hanmail.net
- 회신 기한: 2026년 5월 29일(금) 21시
- 담당: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미조직전략부장 양범식 (010-4401-1356)

1) 산업단지 노동자 참여

(1) 산업단지 공동위원회 설치(지역사회 협의구조 구축)

- 지역사회로 확장된 협의틀을 구축하고 협약을 이끌어냄으로써 산업단지 내 다양한 의제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동 정책의 수준을 높이고, 산업단지 노동자의 권리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례의 제정에 이르는 틀로써 산업단지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의 구조인 공동위원회는 일터와 삶터가 함께 나아가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101-1	산업단지 공동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	0		

(2) 지자체와 산업단지 소규모 사업장이 공동 출연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지원

- 대기업과 정규직에만 유리한 사내복지기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조성한 기금을 복지증진 사업 혹은 행사, 교육·훈련, 자녀 학자금 등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사업장이 모일수록, 더 많은 노동자가 모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편차가 매우 큽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지방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전국 곳곳의 모든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합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102-1	산업단지 공동근로복지기금 예산 지원	0		

2) 산업단지 노동자 노동권 보장

(1)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사업 강화

- 노동자 개개인은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노동약자가 일터에서 겪게 되는 노동시간 문제, 휴가 문제, 4대 보험 문제 등 기초적인 노동조건 및 권리구제에 대해 안내받고,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빈번한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단지 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201-1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상담 지원	0		
201-2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권리구제 사업 지원	0		

(2) 산업단지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산재, 임금 체불, 불법파견 등)

- 고용노동부 자료(2021.7. 기준)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발생한 59,211개 사업장의 91.6%가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025년 1분기 전국 산업단지 229개 제조업체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의 절반 가까이가 불법파견(45.7%)에 해당했습니다. 산재 사망 노동자의 6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2023년 기준)했고, 전체 재해자 수에서도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0.1%에 불과합니다. 전체 노동조합 조직률(2024. 기준) 13%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권리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 모여있는 산업단지의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교육과 근로감독 강화에 대한 높은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202-1	산업단지 노동기본권 교육 지원	0		
202-2	산업단지 근로감독 강화	0		

3) 노동안전망 구축

(1) 산업단지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공동안전관리자 배치 운영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마다 안전관리자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 산업재해 예방계획, 안전규정,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개선, 건강 진단 등에 대해 조언하거나 논의·결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모두 예외로 두고 있어서 노동자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 산업단지에서는 각각의 사업장 규모가 작더라도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산업단지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301-1	산업단지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0		
301-2	산업단지 공동안전관리자 배치	0		

(2) 산재예방 조례 제정 및 사업 예산 편성

-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136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례 제정과 함께 구체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302-1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제정	0		
302-2	산업재해 예방 사업 예산 지원	0		

(3) 산업단지 안전보건 지킴이 사업 직접 운영 신설 및 확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의 ‘안전한 일터 지킴이’, 부산시의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등 사업장의 안전을 점검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맡은 안전보건 지킴이 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전체 사업장 숫자에 비하면 안전보건 지킴이의 수가 턱없이 모자랍니다. 산업단지 차원에서 안전보건 지킴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확대해서 노동자 안전 사각지대를 남김없이 비추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303-1	산업단지 안전보건지킴이 도입 및 확대	0		

4) 노동복지 강화

- 산업집적법은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공동(복지)부담금을 모아 공동 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 마다 따로 설치하기 어려운 휴게실, 편의시설 등을 공동부담금을 통해 마련해 노동자의 휴식과 편의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실제 주거, 건강검진, 휴게, 교통, 안전피복 등에 대한 공동복지 수요가 매우 높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	----	----	----	----

400-1	산업단지 공동(복자)부담금 예산 지원	0		
-------	----------------------	---	--	--

(1) 산업단지 공동휴게시설 설치

- 산업안전보건법은 2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20인 미만의 사업장들은 휴게시설이 필요해도 설치 의무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 각각의 사업장이 2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여러 사업장의 노동자가 모여있는 산업단지라면 휴게 시설을 설치해야 마땅합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401-1	산업단지 공동 휴게실 설치 의무화	0		
401-2	산업단지 공동 휴게실 설치 지원	0		

(2)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확대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화학물질 등으로 인해 일반 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의 세탁·수선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 노동권 증진과 산업 재해 예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이를 모든 지방자치단체, 모든 산업단지로 확대 운영하여 노동자를 유해물질 노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합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402-1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조례 제정	0		
402-2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예산 지원	0		

(3) 공영 통근버스 도입 지원

- 출퇴근 시간에 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산업단지 특성 상 대중교통의 운영 효율이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개별 교통수단 의존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공영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가 크지 않은 데 반해 산업단지 노동자의 통근 편의가 크게 증대되고 출퇴근 시간에만 집중되는 교통 수요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통근버스의 도입은 사업단지 내에서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 해소, 주차 문제 완화, 인력난 완화, 교통 안전 향상 등에 구체적인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 ※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2017-6] 산업단지 공동통근버스 모니터링 및 활성화 방안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403-1	산업단지 공영 통근버스 도입	0		

(4) 무료 건강검진 센터 확대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를 통해 소규모사업장이나 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한 건강 진단과 사후 관리, 사업장 위해도 평가, 작업장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소규모 사업장이 모인 산업단지에서는 더욱 효율적으로 혜택을 넓힐 수 있습니다. 무료 건강검진센터를 산업단지 중심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큼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404-1	무료 건강검진센터 설치 및 확대	0		

(5) 산업단지 노동자 ‘천원의아침밥’ 사업 지원

- 산업단지에는 자체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못하는 규모의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거나, 질 낮은 식사를 피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결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아침 식사를 시중의 절반 가격에 제공하거나(광주), 기초자치단체와 공동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부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가 예산 배정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 확대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천원의아침밥’ 사업 등 지원 사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405-1	‘천원의아침밥’ 예산 지원	0		

(6) 산업단지 노동자 주거 안정 공급·이주노동자 쉼터 설치

-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주거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체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마다 기숙사를 제공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산업단지 입주 업체 입장에서도 산업단지 차원에서 기숙사 혹은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된다면 구인의 어려움 또한 크게 줄어둘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숙사에서 나아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산업단지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 이주노동자들은 대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사업장 변경을 하려면 구직 기간에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친구 집, 모텔, 민간단체 쉼터 등을 전전하며 소득이 없는 기간에 오히려 비용 지출이 많아집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이직 시기에 임시로 기거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합니다.
- 이주노동자 대다수는 공장 내 기숙사에 거주합니다.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사업장 내 부속시설 등 인간다운 주거 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마저도 시끄러운 소음과 진동이 끊이지 않는 생산시설 바로 옆인 경우가 많아 퇴근 후에도 편히 쉬기가 어렵습니다. 이주노동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공기숙사는 더욱 절실합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406-1	산업단지 공공기숙사 공급 및 확대	0		
406-2	산업단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확대	0		

406-3	산업단지 공공기숙사·공공임대주택의 이주노동자 쉼터 활용	0		
-------	-----------------------------------	---	--	--

5) 산업단지 노동인권 보호 근거 마련 및 노동 기본 조례 제정

- 전국 24곳에 노동 기본 조례가 제정(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되어 있습니다. 노동 기본 조례는 해당 지역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24년 민간 주도 실태조사 결과 노동법 위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산업단지의 노동자들은 각종 법 위반에 노출되어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노동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 및 증진하기 위해 노동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합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500-1	노동 인권 조례 제정	0		

(1) 산업단지 지속 발전을 위한 노동 정책 제정

- 노동자는 기업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노동자가 지역에 정주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질과 산업단지의 노동 정책 및 노동인권 보호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노동자의 지역 유출이 지속된다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노동 정책 제정이 필수적입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501-1	노동 정책 제정	0		

(2) 노조법 개정 시행에 따른 원청 교섭 지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노조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을 지원하며, 나아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더욱 열악한 처우에 놓인 노동자를 위해 초기업단위 교섭을 지원하며 산업단지 전체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502-1	원청 교섭 지원	0		
502-2	초기업단위 교섭 지원	0		

2026 지방선거 산업단지 노동자 5대 정책요구 정책질의서 답변서

- 발 신 :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주군수 후보 무소속 국영석 선거사무소
- 담당자 : 국영석 선거사무소 사무장 유성식
- 시행일자 : 2026년 05월 26일

- 회신처 : ybs4740@hanmail.net

- 담당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부지부 미조직전략부장 양범식(010-4401-1356)

- 2026 지방선거 산업단지 노동자 5대 정책요구 정책질의서 답변서

※ 완주군수 후보 무소속 국영석 본인은 귀 노조의 「노동자 5대 정책요구 정책」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별첨과 같이 이에 찬성, 동의하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26 지방선거 산업단지 노동자 5대 정책요구 정책질의서

2026. 05. 26. 민주노총 전북본부 · 민주노총 완주산단대표자 협의회 · 금속노조 전북지부

민주노총 · 금속노조 · 화섬식품노조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아래 내용의 산업단지 노동자 정책요구를 15,174+명의 서명 (전라북도 1,716+명)으로 모았습니다. 이에, 귀 정당 및 후보자에 정책 질의합니다. 각 질의에 대한 입장과 의견은 산업단지 노동자 정책요구에 대한 정당 및 후보자 별 입장을 종합하여 발표할 예정이니 정해진 기한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회신처: ybs4740@hanmail.net
- 회신 기한: 2026년 5월 29일(금) 21시
- 담당: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미조직전략부장 양범식 (010-4401-1356)

1) 산업단지 노동자 참여

(1) 산업단지 공동위원회 설치(지역사회 협의구조 구축)

- 지역사회로 확장된 협의틀을 구축하고 협약을 이끌어냄으로써 산업단지 내 다양한 의제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동 정책의 수준을 높이고, 산업단지 노동자의 권리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례의 제정에 이르는 틀로써 산업단지 공동위원회를 설치가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의 구조인 공동위원회는 일터와 삶터가 함께 나아가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101-1	산업단지 공동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	✓		

(2) 지자체와 산업단지 소규모 사업장이 공동 출연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지원

- 대기업과 정규직에만 유리한 사내복지기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조성한 기금을 복지증진 사업 혹은 행사, 교육·훈련, 자녀 학자금 등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사업장이 모일수록, 더 많은 노동자가 모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편차가 매우 큽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지방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전국 곳곳의 모든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합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102-1	산업단지 공동근로복지기금 예산 지원			
-------	---------------------	--	--	--

2) 산업단지 노동자 노동권 보장

(1)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사업 강화

- 노동자 개개인은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노동약자가 일터에서 겪게 되는 노동시간 문제, 휴가 문제, 4대 보험 문제 등 기초적인 노동조건 및 권리구제에 대해 안내받고,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빈번한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단지 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201-1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상담 지원			
201-2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권리구제 사업 지원			

(2) 산업단지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산재, 임금 체불, 불법파견 등)

- 고용노동부 자료(2021.7. 기준)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발생한 59,211개 사업장의 91.6%가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025년 1분기 전국 산업단지 229개 제조업체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의 절반 가까이가 불법파견(45.7%)에 해당했습니다. 산재 사망 노동자의 6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2023년 기준)했고, 전체 재해자 수에서도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0.1%에 불과합니다. 전체 노동조합 조직률(2024. 기준) 13%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권리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 모여있는 산업단지의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교육과 근로감독 강화에 대한 높은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202-1	산업단지 노동기본권 교육 지원			
202-2	산업단지 근로감독 강화			

3) 노동안전망 구축

(1) 산업단지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공동안전관리자 배치 운영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마다 안전관리자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 산업재해 예방계획, 안전규정,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개선, 건강 진단 등에 대해 조언하거나 논의·결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모두 예외로 두고 있어서 노동자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 산업단지에서는 각각의 사업장 규모가 작더라도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산업단지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301-1	산업단지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301-2	산업단지 공동안전관리자 배치	✓		

(2) 산재예방 조례 제정 및 사업 예산 편성

-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136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례 제정과 함께 구체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302-1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제정	✓		
302-2	산업재해 예방 사업 예산 지원	✓		

(3) 산업단지 안전보건 지킴이 사업 직접 운영 신설 및 확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의 ‘안전한 일터 지킴이’, 부산시의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등 사업장의 안전을 점검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맡은 안전보건 지킴이 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전체 사업장 숫자에 비하면 안전보건 지킴이의 수가 턱없이 모자랍니다. 산업단지 차원에서 안전보건 지킴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확대해서 노동자 안전 사각지대를 남김없이 비추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303-1	산업단지 안전보건지킴이 도입 및 확대	✓		

4) 노동복지 강화

- 산업집적법은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공동(복지)부담금을 모아 공동 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 마다 따로 설치하기 어려운 휴게실, 편의시설 등을 공동부담금을 통해 마련해 노동자의 휴식과 편의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실제 주거, 건강검진, 휴게, 교통, 안전피복 등에 대한 공동복지 수요가 매우 높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	----	----	----	----

400-1	산업단지 공동(복자)부담금 예산 지원	✓		
-------	----------------------	---	--	--

(1) 산업단지 공동휴게시설 설치

- 산업안전보건법은 2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20인 미만의 사업장들은 휴게시설이 필요해도 설치 의무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 각각의 사업장이 2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여러 사업장의 노동자가 모여있는 산업단지라면 휴게 시설을 설치해야 마땅합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401-1	산업단지 공동 휴게실 설치 의무화	✓		
401-2	산업단지 공동 휴게실 설치 지원	✓		

(2)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확대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화학물질 등으로 인해 일반 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의 세탁·수선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 노동권 증진과 산업 재해 예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이를 모든 지방자치단체, 모든 산업단지로 확대 운영하여 노동자를 유해물질 노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합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402-1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조례 제정	✓		
402-2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예산 지원	✓		

(3) 공영 통근버스 도입 지원

- 출퇴근 시간에 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산업단지 특성 상 대중교통의 운영 효율이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개별 교통수단 의존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공영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가 크지 않은 데 반해 산업단지 노동자의 통근 편의가 크게 증대되고 출퇴근 시간에만 집중되는 교통 수요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통근버스의 도입은 사업단지 내에서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 해소, 주차 문제 완화, 인력난 완화, 교통 안전 향상 등에 구체적인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 ※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2017-6] 산업단지 공동통근버스 모니터링 및 활성화 방안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403-1	산업단지 공영 통근버스 도입	✓		

(4) 무료 건강검진 센터 확대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를 통해 소규모사업장이나 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한 건강 진단과 사후 관리, 사업장 위해도 평가, 작업장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소규모 사업장이 모인 산업단지에서는 더욱 효율적으로 혜택을 넓힐 수 있습니다. 무료 건강검진센터를 산업단지 중심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큼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404-1	무료 건강검진센터 설치 및 확대	✓		

(5) 산업단지 노동자 ‘천원의아침밥’ 사업 지원

- 산업단지에는 자체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못하는 규모의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거나, 질 낮은 식사를 피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결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아침 식사를 시중의 절반 가격에 제공하거나(광주), 기초자치단체와 공동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부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가 예산 배정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 확대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천원의아침밥’ 사업 등 지원 사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405-1	‘천원의아침밥’ 예산 지원	✓		

(6) 산업단지 노동자 주거 안정 공급·이주노동자 쉼터 설치

-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주거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체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마다 기숙사를 제공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산업단지 입주 업체 입장에서든 산업단지 차원에서 기숙사 혹은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된다면 구인의 어려움 또한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숙사에서 나아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산업단지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 이주노동자들은 대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사업장 변경을 하려면 구직 기간에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친구 집, 모텔, 민간단체 쉼터 등을 전전하며 소득이 없는 기간에 오히려 비용 지출이 많아집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이직 시기에 임시로 기거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합니다.
- 이주노동자 대다수는 공장 내 기숙사에 거주합니다.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사업장 내 부속시설 등 인간다운 주거 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마저도 시끄러운 소음과 젼동이 끊이지 않는 생산시설 바로 옆인 경우가 많아 퇴근 후에도 편히 쉬기가 어렵습니다. 이주노동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공기숙사는 더욱 절실합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406-1	산업단지 공공기숙사 공급 및 확대	✓		
406-2	산업단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확대	✓		

406-3	산업단지 공공기숙사·공공임대주택의 이주노동자 쉼터 활용	✓		
-------	-----------------------------------	---	--	--

5) 산업단지 노동인권 보호 근거 마련 및 노동 기본 조례 제정

- 전국 24곳에 노동 기본 조례가 제정(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되어 있습니다. 노동 기본 조례는 해당 지역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24년 민간 주도 실태조사 결과 노동법 위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산업단지의 노동자들은 각종 법 위반에 노출되어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노동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 및 증진하기 위해 노동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합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500-1	노동 인권 조례 제정	✓		

(1) 산업단지 지속 발전을 위한 노동 정책 제정

- 노동자는 기업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노동자가 지역에 정주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질과 산업단지의 노동 정책 및 노동인권 보호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노동자의 지역 유출이 지속된다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노동 정책 제정이 필수적입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501-1	노동 정책 제정	✓		

(2) 노조법 개정 시행에 따른 원청 교섭 지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노조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을 지원하며, 나아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더욱 열악한 처우에 놓인 노동자를 위해 초기업단위 교섭을 지원하며 산업단지 전체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질의 번호	내용	찬성	반대	기타

502-1	원청 교섭 지원	✓		
502-2	초기업단위 교섭 지원	✓		